

‘삼중고’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압류 취하해 달라”

비정규직 노조 ‘쟁의 돌입’ 예고 통보...생산라인 가동차질 우려

“‘채권압류’ 취하하고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에 책임다해 달라”

통장 압류에 이은 도급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최근 광주·곡성 공장 침수 피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압류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회사 운영비 통장을 가압류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11일 ‘채권 압류’를 취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도급사가 고용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승소

를 근거로 임금 차액과 이자 등 채권 204억원을 가압류했다.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계좌가 압류되면서 여름 휴가비와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채권 압류’가 장기화하면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고 당장 오는 27일 직원 급여도 지급할 수 없게 돼 ‘노-노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 측이 즉각적인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채권 압류’

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또한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가 나와야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팽팽선 달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약제는 또 있다.

광주, 곡성공장의 하도급 업체 6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원정인 금호타이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비정규직 노조와 진행하던 ‘2020년 단체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제조라인 4개사, 출하·포장라인 2개사 등 총 6개 도급사는 금호

타이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노조에도 오는 31일자로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맞서 지난 7일 관할지 경찰서에 ‘고용 3층계 투쟁 결의대회’ 개최 집회 신고를 한 데 이어 수급사 협의회에는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7-8일 광주·전남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와 곡성공장이 침수돼 공장을 멈춰 세워야 했다.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지난 9일 오후부터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쟁의에 돌입할 경우 생산라인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 집회신고와 쟁의조정 신청 통보는 올해 ‘생존’과 ‘미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경영정상화에 인간힘을 쏟고 있는 전체 임직원들의 의지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채권

압류’를 취하하고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이슬 기자

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강제전역 취소하라” 소송 제기

“사회 정의 묻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

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다”며 “반호인단 소속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간 인사소청 심사 자리에서는 저희 측의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역시 발표된 결과는 기각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육군본부, 그 위의 국방부, 현으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걸었고, 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쭙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그러나 저는 아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혐오가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힘을 믿는다”며 “저와 관련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됐고, 저는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오유나 기자

물난리 여파...이용수 할머니, 오늘 수요시위 못간다

“배상 주장만...‘왜’는 얘기 안 해”

지난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처음으로 12일 수요시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이용수(92) 할머니가 전국적인 수난 상황 등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이 할머니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요시위에서 시작을 했으니, 마무리도 거기서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참석하려고 했는데, 물 난리가 너무도 심하다. 거기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참석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번 수요시위에 서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그동안의 위안부 운동은 해결하라, 사회·배상하라는 내용만 있었지, 일본이 왜 사회·배상해야 하는지(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면서 “이건 아니라고 본다. 학생들이 올바른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있는 위안부 역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전국에 위안부 역사관이 있다. 나눔의집도 있고, 경남도 있

다”면서 “그런데 교육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육관을 만들어 학생들 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으니 학생들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나 배상(문제)은 몇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는 수요시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계획했지만, 수난 피해 상황 등이 계속되자 다음으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할머니가 수난 상황이 빠르게 진정된다면 수요시위에 참석할 수도 있다.

뉴시스

자가격리 두차례 무단 이탈 20대 항소심도 징역 4월

“원심 부당하지 않아”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가격리 기간 자신의 집과 임시 보호시설을 두차례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

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입원했던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 자가격리 해제 이틀을 앞두고 의정부지법에서 피고인 A씨가 임시 보호 시설에서도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호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